

‘새 전남대병원 건립 놓고 또 지자체 유치전’...이번엔 신중해야



전남대학교병원이 ‘새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 발표하자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지자체간 유치경쟁부터 과열되면 지난 2008년과 2018년 처럼 무산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4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와 추진본부, 추진자문단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된 ‘새병원건립추진단’을 지난달 28일 발족하고 건립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추진단은 3개 조직의 인력을 구성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2024년부터 새병원 건립을 추진

추진단 발족부터 광주 지자체·나주 등 유치경쟁 “2008년·2018년 새병원 건립 무산 경험 삼아야”

하겠다는 계획만 세워진 상태다.

또 추진단은 화순전남대병원 옆으로 이전하는 의과대학 부지를 활용해 신축 할지, 현 장소인 동구 학동을 벗어나 타 지역에 새병원을 건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전남대병원은 1910년 9월26일 전남광주자혜의원으로 개원해 1925년 5월16일 전남도립 광주의원, 1952년 4월1일 국립전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1988년 3월1일 전남대학교병원으로 개칭하고 호남 최대 거점병원으로 자리잡았다.

1982년 지어진 현재의 병원건물은

노후화와 병실 부족, 주차난 등이 심각해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병원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지난 2008년과 2018년 구채화 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전남대병원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새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현 위치의 동구는 이전 반대, 광산구와 남구, 인접지역인 나주까지 부지 제공 등을 내걸며 유치전을 벌여 지역간 갈등만 남긴 채 흐지부지 됐다.

이어 3년여만에 새병원 건립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자 유치전은 다시 점화됐다.

나주는 “빛가람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과 한전공대가 들어서고 최첨단 병원을 지향하고 있는 새병원과 산업생태계가 맞아떨어진다”며 “병원 유치를 위한 TF까지 구성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유치를 희망했다.

광주 남구는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옆 빛고을 골프장 부지에 새 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구는 “전남대병원이 이전하면 원도심 쇠퇴를 불러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부지를 의료특구로 지정해 증·개축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대병원은 같은 상황이 반복돼 새병원이 지역간 갈등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지금까지

선임 병원장들이 새병원 건립을 추진했는데 아쉽게도 병원 내 여러 상황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병원 진료 시스템이 최첨단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병원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올해까지 전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2024년부터는 새병원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권중 전남대병원노조위원장장은 “현재의 전남대병원은 큰 기동들이 버티지 못해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기본 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각 지자체간 갈등으로 인해 또 무산되면 지역민만 허탈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동취재본부

“영업직 고령화 설명하며 나이 물었다, 직장내 괴롭힘?”

법원 “고령 직원 직무 능력 비하나 모욕감 줄 의도 없어”

대기업이 간부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무효, 전보는 정당

대기업 간부가 영업 사원 고령화를 설명하는 과정에 하급자에게 나이를 물어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기업 자체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간부가 고령 직원의 직무 능력을 비하하거나 하급자에게 모욕감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모 대기업 지사장 A씨가 대기업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 측이 A씨에게 한 견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만, 전보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2월 11일 법인 고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10여 명이 참석한 행사 자리에서 지사 대표로 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A씨는 영업 사원의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는 점을 설명하

기에 앞서 자신(부장)보다 직급(차장)이 낮은 B씨에게 나이를 물어봤고, B씨가 대답하지 않자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서 ‘하우 올드 아 유?’라고 영어로 나이를 재차 물어봤다.

B씨는 ‘임직원 모두 영업 조직의 고령화를 알고 있는 상황에 A씨가 고령화 현상을 설명하면서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위의 우위성을 이용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A씨는 고객 관리에 있어 나이 든 분을 배제하고 젊은 신입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한 뒤 나이를 물어봤다. 고령자는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 불쾌감·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기존 성과와 내년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영업 사원 평균 연령을 설명하기에 앞서 참석자들의 집중도를 높일 의도였다. B씨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 고령 직원이 제 역할을 다하

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표 내용 또한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기업 고충 심의·인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이후 인사 규정에 근거, A씨를 직책이 없는 일반 직원으로 전보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 직원의 직무 능력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면, 그 자체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A씨의 발표 자료에는 ‘직원들의 역량에 기반해 고객을 배정하겠다. 역량에 맞게 잘 할 수 있는 상품에 집중하겠다’고 기재돼 있다. 이 기업 고충 담당 부서 조사 문답서에도 ‘고객 관리에 있어 나이 든 분을 배제하고 신입으로 지정하겠다’고 A씨가 말했다는 기록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주장이 비합리적이거나 거짓이라고 불만을 사정은 없는 점, A씨가 B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 B씨에게 나이를 물어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민정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 북적이는 열차 승강장’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역을 찾은 귀경객과 귀성객들로 승강장 일대가 북적이고 있다.

확진자 접촉 후 격리 중 마트 간 사회복지무요원 벌금형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지무요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경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무요원 A(2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광주 지역 515번째 코로나19 환자와 접촉, 지난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주거지에 격리 조치됐다.

A씨는 격리 기간인 지난해 11월 8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46분 동안 생필품과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광주 한 마트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감염병 전파

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를 했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은 점,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지급받은 구조 물품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